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No. 32

IIRI Online Series

중국-주변국 관계를 통해서 본 한중 협력 방향

2016. 05

중국-주변국 관계를 통해서 본 한중 협력 방향

2016. 5

*본 보고서는 최근 국내 외교안보분야 민간전문가 다수가 모여 논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발언이나 주장의 출처는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목 차 -

I. 중국의 부상과 전략적 과제	1
II. 중국의 대외전략	1
III. 주변국의 대 중국 인식과 전략	3
IV. 한국의 대 중국 전략에 대한 시사점	6
V. 결론: 한국의 대 중국 정책의 비전과 방향	13

I. 중국의 부상과 전략적 과제

-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은 하나의 역사적 현상임.
- 1978년 경제개혁을 시작한 후 성공적인 경제발전 속에 나타난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에 대한 ‘특수한’ 시각을 가진 중국의 이해와 맞물려 우리에게 전략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
-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강력한 통일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예외 없이 한반도는 큰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였음.
-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 및 지리적 차원의 주변국들도 유사한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부상과 관련한 주요국들의 인식과 전략을 파악하여 한중 협력 방향을 도출함.

II. 중국의 대외전략

1. 중국의 대 미국 전략: 안정적 대미관계 유지

- 중국은 현재 세계강국(global power)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이른바 G2 개념에 근접한 단계에 와 있으므로 미국과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면서 지역강국(regional power)으로서의 위상과 내실을 다져나갈 것임.

2. 중국의 대 일본 전략: 일본의 대중 포위전략 견제

- 일본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주변 국가들을 우호적으로 포섭함으로써 중국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중국에 대한 일본의 봉쇄전략으로 인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주변국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중국의 대 러시아 전략: 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

- 중국으로서는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위상은 상실하였으나 군사력이나 국제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중국의 지정학적 안보를 보장하는데 있어 가장 주요한 국가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대 러시아 전략을 펴나가고 있음.

4. 중국의 대 동남아 및 지역협력 전략: 아세안 중심성 유지

- 중국은 아세안을 지역주의 전략의 구심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내 지역협력에 있어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최대한 존중해오고 있으며, 미국이 그리고 있는 아태지역주의(Asia Pacific regionalism)의 모습보다는 중국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지역주의(East Asian regionalism)의 주도권을 쥐는 방향으로 전략을 떠나가고 있음.

5. 중국의 대 중동 전략: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유지와 정치개입 자제

- 중국은 중동지역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내정 불개입’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적극적 진출’ 및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 유지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외교정책의 전형적 특징인 ‘정냉경열(政冷經熱)’이 나타났으나, 최근 시리아 문제, 이란 핵문제 등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도 무언가 의미 있는 행동을 보이려고 함.

6.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 경계심 희석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내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계심을 희석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함.

7. 중국의 대 서남아시아 전략: 해양 수송로의 확보

- 중국은 인도양과 아라비아해로 진출하기 위해 해역 내 접안 국가를 포섭하는 ‘진주목걸이’ 전략을 펼치고 있는 바, 자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 전략에서 가장 넓은 해역이 접치는 인도와의 갈등도 불사하면서까지 주요 전략적 항만을 건설해 나가는 가운데 파키스탄이 자연스럽게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음.

III. 주변국의 대 중국 인식과 전략

1. 미국의 대 중국 인식과 전략

-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지역패권(regional hegemony)’이 중국에게 위협 당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아프간과 이라크 개입을 매듭짓고 아시아로 시각을 전환함.
- 미국이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서태평양 지역의 제해권에 대해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고 보는 미국은 해·공군력에 초점을 두어 태평양과 대서양 간의 5:5였던 군사배치를 조정하여 2020년까지 해군 함정의 60%를 태평양 상에 배치할 것이며,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함정들을 배치할 계획임.
- 패권국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패권국(들)이 무엇을 하든 패권국-도전국의 관계는 기존의 패권국이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권위(authority)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바,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동맹세력에 대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동맹 전이(alliance transition)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춤.

2. 일본의 대 중국 인식과 전략

-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아시아는 물론 아태지역 전체에 대한 지역 질서 불안정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일본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주변 국가들을 우호적으로 포섭함으로써 중국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일본의 대 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거나 지역적 연계가 강한 제1접촉선(동남아)보다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독자적 레버리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제2접촉선상의 국가들(몽골, 사우디, UAE, 터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러시아의 대 중국 인식과 전략

- 러시아는 현재와 같은 협력적인 미·중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며, 근본적 안보이익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중국이 직접 도전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갖게 되면 지금보다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러시아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위협론보다는 ‘중국기회론’의 입장에서 환영하는 태도가 지배적임.
- 러시아는 ‘중국의 문’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재진입하고, 최근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동 지역에서의 세력 재편에 적극 참여코자 하는 전략을 전개함.

4. 동남아의 대 중국 인식과 전략

-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점증하는 투자와 시장 침투를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레버리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므로 역외 세력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이를 중화하고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강화함.
- 아세안 10개국의 결속이 약해지면 중국의 영향력에 속수무책이라는 인식은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등 역외 세력을 끌어들여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5. 중동의 대 중국 인식과 전략

- 기존의 사우디 안보를 책임져 주었던 미국이 보여준 최근의 중동정책기조 변화에 관하여 사우디 왕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우디는 최근 중국과의 연대 강화 움직임을 보임.
- 이란은 역내에서 중국의 존재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정치적으로 중국이 취하고 있는 ‘불간섭/불개입주의’ 및 이란 핵문제에 관한 ‘외교적 해법 우선’에 이란은 심정적으로 동조해옴.
- ‘아랍의 봄’으로 상징되는 정치변동을 겪은 국가들은 정부의 효율적 지배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아직 구체적인 비전, 전략 및 실행방안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나, 중국과의 관계는 주로 경제협력부문에 집중하여 확대·심화될 가능성이 큼.

6.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의 대 중국 인식과 전략

- 카자흐스탄의 정치 엘리트들은 자국 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증대하고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용인하는 것을 정권유지라는 중요한 과제를 달성해 나가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대 중국 전략은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이익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되 유라시아 지역 내 과거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음.

7. 서남아시아(인도·파키스탄)의 대 중국 인식과 전략

- 인도 대 중국 정책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기본 목표는 경제적 상호이익을 증진하면서 정치,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고 있음.
- 인도와의 갈등관계 국면에서 파키스탄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역내 유일한 군사 동맹국으로 중국이 있어왔고, 현재까지 인도와의 경합 및 적대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중국의 존재는 파키스탄에게는 필수불가결함.

IV. 한국의 대 중국 전략에 대한 시사점

1. 미·중관계를 통해 본 시사점

가. 한반도 변환 플랜 준비

- 앞서 미·중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나듯 우리로서는 미·중관계가 10년 후엔 상당히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국가전략을 짜야 할 상황임.
- 현재로선 미·중이 함께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있고 북한을 보는 중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미·중이 경쟁 속에서도 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향후 10년간 한반도 변환 플랜(예: 비핵화, 통일)을 준비해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음.

나. 한·미·중 협력체제 확립

- 기존의 한·미·일 공조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북핵문제에 대처해 나가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해 한·미·중 간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가는 것이 필요함.
- 북핵문제 해결의 요체는 철저한 국제공조체제 확립과 평화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므로 한·미·중 관계를 단순한 협력체제가 아닌 명실 공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중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함.

다.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이해 확보 노력

- 한미동맹 관련해 사안별로 원칙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견지하고 중국에 대한 설명과 설득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중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해상 등지에서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할 것이며, 천안함·연평도 사태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재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야 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한미양국이 2006년 1월 주한미군 전력운용 관련 협의 시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데 합의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줄 필요가 있으며, 향후 주한미군의 역외 전개가 이뤄지더라도 한미 간 긴밀히 사전협의를 할 예정이므로 역내안정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 MD와 관련해 한국은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나,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高角)발사해 한국을 공격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THAAD 도입을 검토하고,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협력을 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함.
- 통일과정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및 통일 후 한미동맹 유지와 관련해 우선 한중 민간 전문가들 간의 세미나를 통해 중국의 인식과 기대수준을 파악해 나가고 우리 전문가들의 통일 후 동북아 안보비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점진적으로 양국 정부 인사간 각종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한반도 통일 및 동북아 안보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2. 중·일관계를 통해 본 시사점

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모순 제거

- 한국은 중국에 경사되어 미국과의 동맹을 버리거나 일본과 등을 지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동맹 전략을 선택할 수 없음. 반면, 중국을 적대시하고 봉쇄하는 전략에 동승할 경우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손상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지렛대를 상실할 우려가 높음. 따라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모순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함.
-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 있는 외교(balanced diplomacy)를 하겠다는 것은 균형자(balancer) 외교 및 견제 균형(balancing) 전략과 구분되는 개념이긴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균형 있는 외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振子)와 같은 외교는 양측 모두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장차 고립을 자초할 수 있는 외교 방식임.

나. 한일관계 지속적 개선

- 한일 관계의 지속적 개선은 균형 있는 외교를 위해서도,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일관계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동북아 질서 현상타파 유혹이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 한일 간 필요한 것은 ‘신뢰 구축 외교(confidence building diplomacy)’임. 양국 간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간다는 과정(process) 중심의 신뢰 구축 외교로 진행되어야 함.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없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이루어질 수 없음.

다. 중국의 주변국 전략을 고려한 다층적·다원적 대응

- 중국을 염두에 둔 지역 종합 전략이 필요한 동시에, 지역 및 국가들에 맞는 맞춤형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 일본이 중국을 대함에 있어 제1접촉선, 제2접촉선, 제3접촉선과 같은 전략적 우선 수위를 부여하여 접근하듯이, 한국도 지역 전체를 조망하면서 전략적 우선 순위를 염두에 둔 다층적 전략을 구사하는 게 바람직함. 중국도 주변 국가들과의 접근에 있어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확산이라는 동심원적 접근을 시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전략이 요구됨.
- 이슈 영역에 따라서 국가별 연합을 다르게 전개하는 복합 네트워크 전략도 필요함. 사안과 이슈에 따라 중국에 대해 대항 전선과 협력 전선을 넘나드는 유연함이 필요하지만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손상하지 않는 기본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3. 중·러관계를 통해 본 시사점

가.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 형성 지양

- 국제사회의 다극화체제 모색이라는 인식 공유에 기초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실리적 외교 전략이 필요함.
-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마치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듯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오히려 러시아·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한국도 참여함으로써 동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나. 소프트파워 전략 활용

-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토대인 사회적 가치의 공통성 확보를 목적으로 상호간에 일종의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의 표현대로 “오늘날 중·러관계는 전례 없는 최고 수준”에 달할 수 있었던 큰 요인 중 하나는 양국 정상 간의 빈번한 만남을 통한 인간적 신뢰 구축이었음.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국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대중 정책은 정상 간의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적 접근을 모색해야 함.

4. 중·동남아관계를 통해 본 시사점

가. 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전략 수립의 중요성

- 동아시아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에 가까운 세력 변화와 전략적 움직임은 개별적 국가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시야에 넣은 종합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음.
- 한국의 대중 전략은 중국에 대한 개별 전략, 일본에 대한 전략, 동남아에 대한 전략으로 파편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 전체를 총괄하고 포괄적으로 지역 문제를 다루는 체제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문제이며, 유연한 지역전략 구사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함.
- 중국과 일본은 이미 지역 전체를 단위로 한 전략의 수립, 분석, 실행 체계의 검토를 넘어서서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한국은 아직 종합적 지역 전략 수립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음.

나.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적극적 동남아 전개 전략 추구

-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이미지와 강점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저개발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 경제발전의 모델이며, 자기의 손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세계의 몇 안 되는 '성공 신화'를 가진 나라임.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발전의 경험과 민주화의 경험을 전수받기 원한다는 점은 한국 외교의 더없는 값진 자산임.
- 동남아 국가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우호 관계 수립 전략을 구사하여야 함.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Philippines)을 축으로 하는 VIP 전략보다는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싱가포르(Singapore)를 잇는 VIS 전략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임.

5. 중·중동관계를 통해 본 시사점

가. 정치와 경제의 분리 기조 주시

- 중국은 중동에서의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최고의 정책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과 서방이 중동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목도한 바, 이에 따라 중동 내 정치변동에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 함.

-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대하여 중동은 일정부분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중국이 중동에서 미국과의 대척점에 서는 적극적 역할을 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바, 이는 동북아의 정세환경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므로 향후 추이의 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나.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

- 중동의 질서유지 역할을 자임하던 미국이 아시아로의 대외정책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선언하고 중동에서 점차 탈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종의 권력진공(power vacuum)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안보 위협을 느끼는 중동 각국은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을 주목하며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됨.
-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 중동에서의 중국의 입지와 영향력은 동아시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무엇보다 중국은 중동에서의 정치, 군사, 안보적 개입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및 상품시장 유지라는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려 하는 바, 현재 중동 각국이 보여주는 대미 설득 및 유인 차원에서의 나타나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한국의 전략에 부합되지 않음.
- 다만,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전략을 운용하되, 미국이 자신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한국에 '강요'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연성균형(soft balancing) 전략의 일환으로 한중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6. 중·중앙아 관계를 통해 본 시사점

가. 다자간 협력체 활용

-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의 대 중국 정책이 주로 다자간 협력체(예: SCO)의 틀 안에서 시행되었던 것은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 중국과 양자 관계의 고속 발전이 쉽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동북아 다자간의 협력체제(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속에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전략적 접근 방법임.

나. 공공외교 활용

- 중국이 최근 대외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계적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정책 수행을 우리가 역으로 대중국 외교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중국의 강대국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현상의 이면에는 중국을 하드파워(hard power)를 뛰어넘는 다양한 문화적 매력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최근의 범세계적인 ‘한류’ 현상 속에서 중국의 국민들에게도 어필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는, 중국정부가 카자흐스탄에 강제로 이식하려고 하는 중국의 공공외교 정책의 산물과는 달리, 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선호에 의해 나타난 현상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7. 중·서남아 관계를 통해 본 시사점

- 우리로서는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되 미국-일본-호주-인도로 연결되는 대 중국 견제 전선에 명시적으로 가담하는 모양새는 지양하는 게 좋음.
- 오히려 인도의 경우는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꾸준히 개선해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의 대 중국 외교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8. 종합적 시사점

가. 전략적 대안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인식 지양

- 주변국의 대 중국 정책을 연구한 결과 모두 중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진 중국을 자신들의 ‘중단기 전략적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남.
-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이를 보완하거나 중국의 부상에 따른 일종의 ‘위험회피(hedging)’ 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고 있는바, 미국이 우려하는 (동맹국들이 중국 편으로 다가가는) ‘동맹 전이(alliance transition)’는 일어나고 있지 않음.
-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역시 중국과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면서도 전통적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
- 중국을 사실상 유일한 동맹국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으로서 9·11 이후 일시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했으나 반테러전쟁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멀어졌음.
- 이렇게 볼 때 한국 역시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대 중국정책을 펴서는 안 되며, 중국의 주변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하듯 미·중간의 갈등보다는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힘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 전망이므로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우리로서는 미국의 힘이 상대적 우위에 있을 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임.

나. 중국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유대 필요성

- 이번 연구 대상에 포함된 나라들 중에서 대 중국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유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이들의 전략적 의도가 중국 견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입장에서 그러한 이유로 이들과의 전략적 유대를 거부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북한이나 (미·일의 경우) 지역협력을 내세워 (동남아의 경우) 이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인도의 경우 대 중국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의 전략적 유대를 원하는지 불분명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인도 전략 협력을 해 나가다 중국이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때 대 중국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제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한·인도 전략협력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됨. 명시적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로 연결되는 대 중국 견제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자제하면서 한·미·일 구도에 한·호주 및 한·인도 협력 강화를 더한 형태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음.
- 파키스탄은 아프간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반테러 동맹이 ‘와해’된 이후 중국 쪽으로 완전히 기운 상태로 한국과의 전략적 유대를 별반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대 주변국전략 운용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파키스탄과의 정무적 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의 경우 아직까진 중국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한국과의 전략적 유대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으나,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구상’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유대를 형성에 나갈 필요가 있음.

V. 결론: 한국의 대 중국 정책의 비전과 방향

1. 한국의 대 중국 정책의 비전

- 한국의 대 중국 정책의 비전은 한중 양자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통일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한중관계가 경제 및 안보 부문 간 균형을 이루고, 여타 양자 및 다자관계(한·미, 한·일, 한·러 및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임.
- 과거 20여 년 전 독일통일이 이뤄질 때는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유일초강대국으로 남은 상황이었기에 ‘미국 변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으나,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감안해 ‘중국 변수’를 미국 변수 못지않게 중시해야 할 상황임.
-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는 상황은 통일한국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중국의 지도부가 갖게 되었음을 의미함.
- 중국이 우리의 제1교역국이나 정치안보적으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관계이므로, 한미동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한중관계의 경제적 측면과 안보적 측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협력을 하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중관계가 한·미, 한·일, 한·러관계 등과 충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이는 결국 중국과 여타 강대국과의 관계, 즉 미·중, 중·일, 중·러관계가 안정성과 균형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

2. 구체적 정책 방안

가. 한·중 전략경제대화 운용

- 우선 우리 자신이 통일한국의 비전을 정립하고 대 중국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한·중 전략대화의 체계적 운영이 급선무임.
- 문제는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공개적’인 토의를 기피한다는 점이므로 (정부와 충분히 교감하는) 관련 전문가들을 활용해 1.5 트랙(정부관계자는 초기에 참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참여) 한·중 전략대화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임.
- 한중 전략대화가 정무적 이슈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중관계처럼 한·중 전략경제대화(S&ED)로 확대해 포괄적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음.

나. 한·미·중 전략대화 활성화

- 2013년 6월에 시작한 한·미·중 1.5 트랙 전략대화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한·미·중 전략대화에서 궁극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 중의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임.

다. 북한 위기관리 협의체 가동

-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 ‘공포정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엘리트 구조의 균열이 발생해 ‘정권 위기(regime crisis)’ 또는 ‘정권 붕괴(regime collapse)’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미·일이 논의하는 것과 별도로 한·중 또는 한·미·중 정부 간에 북한 위기관리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가 있음.

라. 중국내 여론에 대한 관심 제고

- 북한 3차, 4차 핵실험이후 중국내 여론이 중국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중국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지속적으로 중국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론 모니터링 및 형성 노력을 강화해야 함. (끝)